

여성전문인력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 정치분야를 중심으로 -1)

김원홍* · 민무숙** · 김혜영*** · 김영미****

초 록

유엔개발기구(UNDP)가 내놓은 2001년도 인간개발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인간개발지수(HDI)는 162개국 중 27위, 여성개발지수(GDI)는 146개국 가운데 29위, 여성권한척도(GEM)는 64개국 가운데 61위이다. 이는 한국여성의 취학률이나 대학교육 등 인간개발의 측면에서는 남녀평등이 어느 정도 실현되어 세계 선진국에 근접하고 있으나, 사회에서 행사하는 힘의 크기가 아주 미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권한척도의 대표적인 지표가 국회의석에서 여성비율인데, 국회의 경우 한국은 6.2%(17명)로 147개국 가운데 119위에 해당한다. 지방의 경우 2002년 6월 현재 기초자치단체장 0.9%(2명), 광역의회 9.2%(63명), 기초의회 2.2%(77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처럼 한국여성의 정치참여가 낮은 원인으로서는 정치 영역을 남성의 영역으로 간주하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돈이 많이 드는 선거풍토와 정당들의 여성에 대한 지원책의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아울러 여성들의 소극적인 자세도 여성의 정치참여의 장애요인으로 남고 있다. 외국의 경우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하여 할당제의 도입 뿐 아니라, 정치훈련의 강

*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 한국여성개발원 선임연구원, ****상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1) 본 논문은 학술진흥재단의 2000년 협동연구 특별정책지원과제 지원비에 의하여 한국여성개발원(연구책임자 : 김원홍(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민무숙(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김혜영(한국여성개발원 전문연구원), 김영미(상명대학교 교수)이 수행한 「여성전문인력확대를 위한 정책과제-정치, 행정, 연구관련 분야를 중심으로-」(과제번호 KRF-2000-044-C00015)의 내용중 일부를 요약, 수정보완하여 발표하는 논문임.

화를 통하여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실제, 세계에서 여성의원 비율이 가장 높은 스웨덴의 경우 시민당은 정당명부에 여성후보 50%이상 할당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외에도 여성정치인 육성을 위한 리더십교육 및 차세대육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여성의 정치참여가 확대되어야 국가발전이 가능하다는 인식 하에 각종 선거에서 적어도 후보 수준에서는 남녀동수를 보장하도록 하는 법안을 의회에 상정하여 2000년에 각급 선거의 후보에 여성을 50% 공천토록 하는 남녀동수 공천법을 통과시켰고, 만일 남녀동수 공천법을 어길 시 국고보조금을 50%까지 삭감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도 노동당은 여성할당제를 채택하고 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도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하여 정당법에 국회, 광역의회 여성할당제를 도입하였으나, 보다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정당, 정부, 여성단체, 학계, 언론 등의 노력이 따라야 할 것이다. 실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하여 정당들은 ① 지역주의의 타파와 함께 여성의 정치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선거구제로로의 개편(국회, 광역의회: 대선거구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기초의회: 2개 동을 한 선거구로 하여 유권자가 여성 1명, 남성 1명을 선출하는 선거구제)이 필요하며, ② 정당법에 국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지역구 여성공천할당제 도입 및 불이행시 국고보조금을 50%까지 삭감 ③ 여성정치발전기금의 설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경선과정에서의 여성의 대표성 확보를 위하여 ① 경선제의 대통령선거, 광역단체장선거에만 제한 적용 및 공정성 확보 ② 중앙당에 후보심의상설기구 설치 및 지구당에서 후보추천시 복수추천제 도입 ③ 당직 할당제를 도입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하여 지원예산을 늘려야 하며, 여성단체들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여성후보 발굴 및 교육, 선거운동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야하며, 학계도 연구를 통하여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을 해야 한다. 아울러 언론도 고정적인 성역할의 타파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I. 서론

유엔개발기구(UNDP)에서는 1995년 북경 제4차 세계여성대회를 계기로 세계 각국 여성의 지위를 비교할 수 있는 여성관련지표(여성개발지수, 여성권한척도)를 처음으로 개발하여, 매년 발간하는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에 인간개발지수(HDI)와 함께 여성개발

지수(GDI), 여성권한척도(GEM)를 발표해 오고 있다.²⁾ 유엔개발기구(UNDP)가 내놓은 2002년도 인간개발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인간개발지수(HDI)는 162개국 중 27위, 여성개발지수(GDI)는 146개국 가운데 29위, 여성권한척도(GEM)는 64개국 가운데 61위다.³⁾ 이는 한국여성의 취학률이나 대학교육 등 인간개발의 측면에서는 남녀평등이 어느 정도 실현되어 세계 선진국에 근접하고 있으나, 사회에서 행사하는 힘의 크기가 아주 미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권한척도의 대표적인 지표가 국회의석에서 여성비율인데, 국회의 경우 한국은 6.2%(17명)로 181개국 가운데 100위에 해당한다.⁴⁾ 지방의 경우 2002년 6월 현재 기초자치단체장 0.9%(2명), 광역의회 9.2%(63명), 기초의회 2.2%(77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1991년의 광역의회, 기초의회 여성의원 비율 각각 0.9%, 1995년의 여성기초자치단체장 0.4%, 광역의회 여성의원 5.8% 기초의회 여성의원 1.6%, 1998년의 광역의회 여성의원 5.9%, 기초의회 여성의원 1.6%에 비하여 다소 증가한 것이다. 이나마 여성의원이 과거에 비해 늘어난 것은 여야간에 2000년 제16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비례대표제 여성할당 30%를 정당법에 명문화하였고, 2002년 제3차 동시선거를 앞두고 국회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하여 광역의회 비례대표제 당선권 범위 내 여성 50%이상을 공천하고, 광역의회 지역구 할당제 30%를 노력사항으로 공천할 것으로 정치관계법에 명시한 결과에 기인한 것이 크다. 우리는 지금 지방자치를 재개한지 12년이 넘었다. 특히 지방자치가 생활정치로 뿌리내리기 위하여 보다 많은 여성들이 지방의회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그 이유로는 무엇보다 높아진 여성의 교육수준과 사회참여 욕구를 들 수 있으며, 지방자

2) 인간개발지수(HDI : Human Development Index)는 각국의 교육수준, 국민소득, 평균수명 등 주요통계를 활용하여 인간개발성취의 정도를 평가하여 발표하고 있다. 여성개발지수(GDI : 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는 교육수준, 소득 및 의료수준 등에 있어서의 남녀평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한 지수로 평균수명, 문자해독률, 취학률, 남녀소득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성권한척도(GEM : Gender Empowerment Measure)는 각국의 여성들이 정치, 경제활동과 정책결정과정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를 점수로 환산한 것으로 여성의원비율, 여성의 고위행정관리직 비율, 여성의 전문기술직 비율 등에 의거 산출한다. 출처 : 행정자치부 여성과 공직 홈페이지 참조.

3) UNDP(2002), *Human Development Report* 2002.

4) <http://www.ipu.org/wmn-/classif.htm>

치제가 생활정치로서 지방자치제 성격과 관련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환경, 문화, 경제활성화를 여성의 전문성이 보다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여성 정치인이 적은 상황에서 여성의 지방자치참여는 후배 여성들에게 많은 귀감이 될 것이다. 2001년 현재 세계은행(IBRD)의 발표에 따르면 여성들의 의회진출이 많은 나라일수록 부정 부패가 적고 국민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또한 우리나라 여성들이 대표로서 지방정치에 많이 참여해야 하는 하나의 당위성이라 할 수 있다.⁵⁾

대의정치 제도하에서 여성의 저대표성과 관련하여 흔히 제기되는 문제는 첫째, 여성이 참여한다고 정치가 과연 달라질 것인가, 둘째, 세계인구의 반이 되는 여성이 정부 공직과 의회에서 그 수만큼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왜 그리도 중요한 이슈가 되는가 등이다. 여성학자들은 정치과정에서 여성인구에 걸맞는 대표성 확보는 두 가지 근거에서 반드시 성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첫째, 민주주의 이론에 입각하여 여성계층의 대표성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이론적, 규범적 근거와 둘째, 여성은 그들 특유의 정치적 정향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남성중심의 정치에 또 다른 정치스타일, 정치문화를 투입할 수 있다는 현실적이고 경험적인 근거를 들고 있다.⁶⁾ 따라서 정치과정에서의 여성의 저대표성은 왜곡되고 불균형한 정책결정을 낳을 수 있고 사회에 대한 여성지도자들의 기여 기회를 봉쇄하게 되어 인적 자원 낭비로 정치발전을 저해한다는 논리이다. 여성의 정치참여가 부진한 상황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논거는 바로 여기에 있다.

아무튼 우리나라는 지금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문제에 관심이 크다. 정치권은 정당법 31조에 광역의회 지역구 30%, 비례대표제 50% 명시한 것이외에 노무현 대통령은 제17대 대선공약으로 국회의원 비례대표제 50%, 지역구 30% 여성공천할당제를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이 또한 정당법에 제도화 해야하는 과제가 있다. 아울러, 정부는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정책결정과정 및 정치참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5) 여성부 소식지 2002년도 봄호.

6) 이범준(1997), 「21세기 정치와 여성」, 『21세기 정치와 여성』(서울:나남 출판), pp.23-25.

에 근거하여 2000년 이후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예산을 확보한 후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여건조성을 위하여 국민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지원사업과 여성후보 발굴 및 유권자의식교육 등을 위해 활동하는 여성단체와 공동협력사업을 실시하였고, 2001년부터 차세대 여성지도자 육성을 위한 지도자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여성단체들도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정치지도력 향상 프로그램 및 차세대 여성지도자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비슷하다. 그리고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에서도 정치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결과 여성들의 정치적 지위는 제한된 가운데 증가하고 있다.

본고는 이제 21세기의 지방화시대를 맞아 특히 지방자치제의 선출직에 여성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하기 위하여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기본인식하에 먼저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에 여성참여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한 후 외국사례를 고찰하여 지방자치제 선출직에 여성참여 확대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기본목적이 있다.

II. 우리나라 지방자치제 선출직에 여성참여 현황과 과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2003년 2월 현재 시·도별 16개 광역자치단체와 시·군·구별 232개의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는 1952년에 처음으로 실시되어 3차례 지방의회를 구성하였으나 1961년에 중단하였다가, 1991년 다시 재개된 이래 1995년부터 지방선거를 통합하여 실시하고 있다. 2002년 6월 13일 실시한 제3차 동시지방선거의 경우 기초의회에 출마한 여성후보자는 222명으로 1998년의 지방선거시 보다 82명의 후보가 증가하였다. 이는 제3차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과 여성단체들이 여성후보를 내려고 하는 노력이 과거보다 커지고, 생활정치인 지방정치에 여성들이 많이 들어가야 지방자치가 발전한다는 여성계 및 주민들의 인식이 바뀐데서 비롯된 것이다. 지방의회 여성후보자별 당선자수는 기초의회 의원 중 77명으로 기초의회 의원 중 2.2%를 차지하여 지난 번 지방선거의 1.6%에 비하여

0.6% 포인트 증가하였다. 광역의회 선거에서는 지역구에 48명(3.3%)의 여성후보가 나와 14명이 당선되었고, 비례대표제의 경우 116명(55.5%)의 여성후보가 공천되어 49명이 당선되어 총 63명(9.2%)의 광역의회 여성의원이 선출되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2002년 광역자치단체장에 여성이 나오지 않았고, 기초자치단체장에 8명이 출마하여 2명 당선되었다. 1991, 1995, 1998, 2002 지방의회 선거 여성후보자 및 당선자 수를 살펴보면 표 1, 2와 같다.

<표 1> 1991, 1995, 1998, 2002 기초의회 의원선거 여성후보자 및 당선자 수

연 도	전체 후보자수			당 선 자 수		
	전 체	여 성	여성 /전체(%)	전 체	여 성	여성 /전체(%)
1991년	10,151	123	1.2	4,303	40	0.9
1995년	11,970	206	1.7	4,541	71	1.6
1998년	7,450	140	1.9	3,490	56	1.6
2002년	8,373	222	2.7	3,485	77	2.2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정리.

<표 2> 1991, 1995, 1998, 2002 광역의회 의원선거 여성후보자 및 당선자수

연도	후보자수						당선자수					
	전체		여성		여성/전체(%)	전체		여성		여성/전체(%)		
1991년	2,885		63		2.2	866		8		0.9		
1995년	지역구	2,449	40		45	1.6	972	875	13		1.5	
	비례	178	119	79					44.3	56		43
1998년	지역구	1,571	37		61	2.4	690	616	14		2.3	
	비례	180	91	54					30	41		27
2002년	지역구	1,531	48		3.1	3.1	682	609	14		2.3	
	비례	209	164	116					55.5	63		49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정리.

제3차 동시지방선거에서 여성후보들이 출마하고, 당선된 것에 대해 정당별·지역별로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기초의회 경우 여성후보들이 가장 많이 나온 지역은 서울(80명), 경기(45명), 전북(12명), 인천, 광주, 경북(11명), 부산(9명), 대구(8명), 강원, 경남(7명), 대구, 충남, 전남(6명), 울산(4명), 충북(3명), 대전(2명) 등이었고, 제주도의 경우 여성이 한명도 출마하지 않았다. 당선자가 가장 많이 나온 지역 순으로 살펴보면, 서울(29명), 경기(17명), 광주(95명), 인천, 경북(4명), 부산, 전남(3명), 대구, 충북, 전북, 경남(2명) 대전, 울산, 강원, 충남(1명) 순이었다(표 3 참조).

<표 3> 2002년 기초의회 선거 지역구 여성 후보자 및 당선자의 지역별 분포

성별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후보자	80	9	8	11	11	2	4	45	7	3	6	12	6	11	7	0
당선자		29	3	2	4	5	1	1	17	1	2	1	2	3	4	2	0	77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3차 동시지방선거 홈페이지 정리.

광역의회 지역구의 경우 여성후보들이 가장 많이 낸 정당 순으로는 한나라당(13명), 민주당(12명), 무소속(10명), 민주노동당(7명), 사회당(5명), 미래연합(1명) 등이었다. 여성후보가 당선된 순으로는 한나라당(9명), 민주당(4명), 무소속(1명)이었다. 지역별로 여성후보가 가장 많이 나왔던 곳은 서울(11명), 부산(7명), 경기(6명), 전남(5명), 인천, 광주(4명), 대구(2명) 등의 순이었다. 여성후보가 당선된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경기(2명), 인천, 울산, 충남, 전북(1명)이 당선자가 있었다(표 4 참조).

<표 4> 2002년 광역의회선거 지역구 여성 후보자 및 당선자의 정당별·지역별분포

정당 지역	한나라당		민주당		미래연합		민주노동당		사회당		무소속		전체	
	후보자	당선자	후보자	당선자	후보자	당선자	후보자	당선자	후보자	당선자	후보자	당선자	후보자	당선자
서울	1	1	4	1	1	·	3	·	·	·	2	·	11	2
부산	2	2	·	·	·	·	1	·	4	·	·	·	7	2
대구	2	2	·	·	·	·	·	·	·	·	·	·	2	2
인천	1	1	2	·	·	·	·	·	1	·	·	·	4	1
광주	1	·	2	2	·	·	1	·	·	·	·	·	4	2
대전	·	·	1	·	·	·	·	·	·	·	·	·	1	·
울산	·	·	·	·	·	·	·	·	·	·	1	1	2	1
경기	2	2	2	·	·	·	2	·	·	·	1	·	6	2
강원	·	·	·	·	·	·	·	·	·	·	·	·	·	·
충북	·	·	·	·	·	·	·	·	·	·	1	·	1	·
충남	1	1	·	·	·	·	·	·	·	·	·	·	1	1
전북	·	·	1	1	·	·	·	·	·	·	1	·	2	1
전남	3	·	·	·	·	·	·	·	·	·	2	·	5	·
경북	·	·	·	·	·	·	·	·	·	·	·	·	·	·
경남	·	·	·	·	·	·	·	·	·	·	1	·	1	·
제주	·	·	·	·	·	·	·	·	·	·	1	·	1	·
전체 (%)	13	9 (64.3)	12	4 (28.6)	1	0 (0.0)	7	0 (0.0)	5	0 (0.0)	10	1 (7.1)	48	14 (100.0)
정당 전체 (%)	54 (24)		49 (29)		8 (12.5)		67 (10.4)		6 (8.3)		41 (23)		146 (33)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3차 동시지방선거 홈페이지 정리.

광역의회 비례대표제의 경우 여성후보들이 가장 많이 낸 정당 순으로는 한나라당(42명), 민주당(36명), 자민련(10명), 민주노동당(20명), 사회당(5명), 녹색평화당(2명), 노권당(1명) 등이었다. 여성후보가 많이 당선된 정당 순으로는 한나라당(22명), 민주당(15명), 민주노동당(9명), 자민련(3명)이었다. 지역별로 여성후보가 가장 많이 나왔던 곳은 서울(17명), 경기(13명), 대전(9명), 충북, 충남, 경북(7명), 전남, 경북(7명), 부산, 전북(6명), 인천, 울산, 강원(5명), 대구, 광주, 제주(4명) 등의 순이었다. 광역의회 비례대표에서 여성당선자가 많았던 지역별 순위로는 서울, 경기(6명), 강원, 경북, 경남(4명), 부산, 대전, 충북, 충남, 전남(3명), 광주, 울산, 전북, 제주(2명), 대구, 인천(1명) 등의 당선자가 있었다(표 5 참조).

<표 5> 2002년 광역의회선거 비례대표 여성후보자·당선자의 정당별·지역별분포

단위 : 명

정당 \ 지역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민주연합		노권당		녹색평화당		민주노동당		사회당		전 체		
	후보자	당선자	후보자	당선자	후보자	당선자	후보자	당선자	후보자	당선자	후보자	당선자	후보자	당선자	후보자	당선자	
서울	7	3	5	3	2	·	·	·	·	·	·	2	1	1	·	17	6
부산	2	1	2	1	·	·	·	·	·	·	·	1	1	1	·	6	3
대구	2	1	1	0	·	·	·	·	·	·	·	1	·	·	·	4	1
인천	2	1	1	0	·	·	·	·	1	·	·	1	·	·	·	5	1
광주	1	·	2	1	·	·	·	·	·	·	·	1	1	·	·	4	2
대전	3	1	2	1	2	1	·	·	·	·	·	1	·	1	·	9	3
울산	2	1	1	0	·	·	·	·	·	·	·	2	1	·	·	5	2
경기	5	3	5	2	·	·	·	·	·	·	·	2	1	1	·	13	6
강원	2	2	2	1	·	·	·	·	·	·	·	1	1	·	·	5	4
충북	2	2	2	·	3	1	·	·	·	·	·	1	·	·	·	8	3
충남	2	1	2	1	2	1	·	·	1	·	·	1	·	·	·	8	3
전북	2	·	2	1	·	·	·	·	·	·	·	1	1	1	·	6	2
전남	2	·	3	2	·	·	·	·	·	·	·	2	1	·	·	7	3
경북	4	3	2	1	·	·	1	·	·	·	·	1	·	·	·	8	4
경남	3	2	2	1	1	·	·	·	·	·	·	1	1	·	·	7	4
제주	1	1	2	1	·	·	·	·	·	·	·	1	·	·	·	4	2
전체	42	22	36	15	10	3	1	0	2	0	20	9	5	0	116	49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3차 동시지방선거 홈페이지 정리.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한나라당 2명, 민주당 2명, 무소속 4명이 출마

하였으나, 한나라당의 여성후보 2명이 부산에서 당선되었다(표 6 참조).

<표 6> 2002년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시 여성후보자의 정당공천과 당선여부

단위 : 명(%)

정 당	공 천	당 선	당선율(%)
한 나 라 당	2	2	100.0
민 주 당	2	0	0
무 소 속	4	0	0
계	8	2	25.0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3차 동시지방선거 홈페이지 정리.

이처럼 금번 선거에서 여성단체장과 여성의원이 과거보다 늘어난 것은 정당들이 정치관계법에 여성공천할당제를 명시한데서 영향을 받았으나, 아무 준비 없이 경선제를 도입하여 여성들은 공천과정에서부터 위축되어 당초 여성계에서 기대했던 것에 비하여 아쉬운 측면이 있다. 앞으로 해결되어야 할 우선 과제로는 지역구 할당제의 도입과 함께 경선제와 조화를 이루면서 보다 많은 여성후보를 발굴하고, 육성하고, 당선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여성을 공천하고 선거지원 해주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여성들도 적극적으로 정당활동과 지역활동을 통하여 인지도를 넓혀 나가야 할 것이다.

Ⅲ. 지방선거후보자를 통해본 여성의 지방자치 진출 촉진요인 분석

지방자치단체 의회를 구성하는 의원의 입직경로 및 진출요인, 당선 후 활동을 분석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의 훈련장인 지역정치에서의 여성 활동가 확대 요인을 찾아보고자 지방의회선거 후보자를 대상으로 선거 과정과 당선후 의정활동, 여성정치참여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분석하였다.

1. 조사·분석의 설계

본 분석을 위해 조사에 응답한 사람은 총 152명으로 제2차 지방선거에서 당선자가 90명이고, 낙선자가 44명이다. 당선자 90명 중 38명은 광역의회의원에 당선된 사람이며, 52명은 기초의회의원에 당선된 사람이다. 당선자를 남녀로 구분하면, 남성은 58명, 여성은 32명이다. 따라서 응답자 중 현직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 의회의원은 59.2%이다(표 7). 조사시기는 2001년 11월 20-30일까지였다.

<표 7> 조사응답자의 당선유무에 따른 출마선거명

단위 : 명(%)

구 분		남 성	여 성	전 체
당 선	광역의회선거	25(43.1)	13(40.6)	38(42.2)
	기초의회선거	33(56.9)	19(59.4)	52(57.8)
	소 계	58(100.0)	32(100.0)	90(100.0)
비당선	광역의회선거	13(40.6)	5(16.7)	18(29.0)
	기초의회선거	19(59.4)	25(83.3)	44(71.0)
	소 계	32(100.0)	30(100.0)	62(100.0)

성별로는 남성이 90명이고, 여성이 62명으로 응답자중 여성은 40.8%를 차지한다. 연령은 50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여 44.7%이고, 다음은 40대 27.0%, 60대 이상이 24.3%, 30대는 3.9%를 차지하였다. 조사응답자의 학력은 대졸이 가장 많은 46.7%를 차지하고, 다음은 고졸 28.3%, 대학원졸 23.0%, 중졸, 초등졸은 각각 한 명에 불과하다.

2. 지방선거 남녀입후보자의 선거과정 분석

1) 남녀후보자의 선거과정 분석

지방선거에서의 후보자로서 등록상황은 광역의회의원후보자가 37.0%, 기초의회후보자가 62.9%로 과반수 이상이 기초의회후보자 경력을 갖고 있다. 이러한 후보자가 지방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정하는 데 영향을 받은 선택요인이 있었는가에 대하여 가장 많은 응답으로 ‘남의 권유보다는 본인 스스로 선택’으로 41.1%이고, 다음은 ‘정당 또는 지역구 위원장의 추천’이 24.5%, ‘지역주민’이 21.2%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응답자를 남녀를 구분하여 보면, ‘남의 권유보다는 본인 스스로 선택’에서 남성 49.4%, 여성 29.0%로 응답비율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여성응답자의 경우 가장 많은 응답이 ‘정당 또는 지역구 위원장의 추천’이라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여성의 경우는 주변의 권유에 의하여 선거에 출마한 경우가 자신이 선택한 경우보다도 많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정치활동에 나서기를 꺼리는 소극적 경향을 보이는 데 주변인의 적극적인 권유가 지역사회 정치활동으로의 진출에 크게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표 8).

<표 8> 지방선거출마에 영향을 미친 인적 요인

단위 : 명(%)

구 분	남 성	여 성	전 체
남의 권유보다는 본인 스스로 선택	44(49.4)	18(29.0)	62(41.1)
배우자/가족/친구	2(2.2)	5(8.1)	7(4.6)
선배 여성정치인의 권유로	-	1(1.6)	1(0.7)
정당 또는 지역구 위원장의 추천	18(20.2)	19(30.6)	37(24.5)
지역주민	23(25.8)	9(14.5)	32(21.2)
여성단체	-	6(9.7)	6(4.0)
기타	2(2.2)	4(6.5)	6(4.0)
계	89(100.0)	62(100.0)	151(100.0)

그리고, 지방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정한 시기를 보면, 남녀후보자간에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데, 남성의 경우는 선거실시 4년 전부터와 선거실시 6개월 전부터가 각각 28.1%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응답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의 경우는 선거실시 6개월 전부터가 27.4%이고, 선거실시 1개월 전부터가 24.2%, 선거실시 1년 전부터가 21.0%를 차지한다. 선거실시 2년전부터라는 응답을 비교하여 보면, 남성후보자의 경우는 39.3%를 차지하는 반면, 여성응답자의 경우는 17.8%를 차지하여 대조를 이룬다. 여성출마자는 남성후보자와 비교하면 출마를 결정한 시기가 선거시기에 가까울 무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이 선거에 출마를 결정하는 시기가 선거에 임박한 것은 정치활동을 오래 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하는 경우가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표 9).

<표 9> 1998년 지방선거 출마결정 시기(선거기점을 기준으로)

단위 : 명(%)			
구 분	남 성	여 성	전 체
선거실시 4년 전부터	25(28.1)	5(8.1)	30(19.9)
선거실시 2년 전부터	10(11.2)	6(9.7)	16(10.6)
선거실시 1년 전부터	9(10.1)	13(21.0)	22(14.6)
선거실시 6개월 전부터	25(28.1)	17(27.4)	42(27.8)
선거실시 1개월 전부터	14(15.7)	15(24.2)	29(19.2)
기타	6(6.7)	6(9.7)	12(7.9)
계	89(100.0)	62(100.0)	151(100.0)

$\chi^2=12.181$ df=5 p=0.032

또한, 제2차 지방선거 출마당시 소속정당이 있었는지를 알아보았다. 정당소속출마자는 응답자의 65.5%이고 무소속은 34.5%로 소속정당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많았다. 광역의회 출마자가 56명인데도 불구하고 정당소속이라는 응답이 95명에 달하는 것은 기초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한 경우도 자신이 공식적으로는 특정정당후보로 출마하지는 않았으나 정당과 관련 있는 후보자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면 후보자간에 정당공천권을 획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알아보면, 이에 대하여

응답을 한 94명 중 66%는 공천을 받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응답을 하였고, 34%는 공천이 힘들었다고 응답을 하였다. 남녀응답을 구분하여 보면, 여성응답자가 공천에 대한 어려움이 크지 않았다는 응답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자신이 정치활동에 나서기까지는 힘이 들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변사람들의 권유에 의해서 정치활동을 권유받기 때문에 공천에는 크게 어렵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표 10).

<표10> 1998년 소속정당의 정당 공천권 획득 어려움

단위 : 명(%)

구 분	남 성	여 성	전 체
매우 쉽게 공천받음	19(32.2)	18(51.4)	37(39.4)
쉽게 공천받은 편	17(28.8)	8(22.9)	25(26.6)
어렵게 공천받은 편	16(27.1)	5(14.3)	21(22.3)
매우 어렵게 공천받음	7(11.9)	4(11.4)	11(11.7)
계	59(100.0)	35(100.0)	94(100.0)

$\chi^2=21.879$ df=6 p=0.010

2) 1998년 지방선거 당시의 선거과정에 나타난 여성후보자의 애로사항

제2차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로 선거를 치르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었는지를 알아본 결과, 가장 많은 응답은 가정에 대한 부담으로 26.2%를 차지하며, 다음은 가족과 친지들의 이해 및 지원부족이 20.0%, 정치적 적응능력 17.2%, 경험부족에 11.0%가 응답을 하였다. 남녀를 분리하여 보았을 때 남녀간의 응답이 차이가 있다라고 보기는 힘들다(p=0.928). 선거를 치르면서 가장 힘든 일이 가정에 대하여 안정적인 책임을 다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가족과 친지들의 이해 및 지원부족과 정치적 적응능력이 힘든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선거과정상에서 자신에게서 기인되는 일 이외에 외부적 요인으로

가장 많은 응답이 자금부족으로 44.3%이며, 다음은 선거활동지원 인력 부족 19.5%, 성별에 대한 편견 16.8%가 지적을 하였다. 이러한 응답을 남녀를 구분하여 보면 차이가 있다($p=.000$)고 볼 수 있는 데, 남성의 경우는 가장 많은 응답이 자금부족이고, 여성의 경우는 성별에 대한 편견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앞에서 분석한 내용을 당선자만을 분리하여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자금부족이 가장 많은 응답을 나타내었고, 여성의 경우 성별에 대한 편견, 자금부족에 많은 응답을 나타내고 있다.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선거자금의 부담은 돈이 드는 한국의 선거풍토상에서 제외할 수 없는 요소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 당선자에게서도 성별에 대한 편견은 선거과정에서 힘든 요소로서 자금부족과 함께 우선적으로 지적되는 요인이라는 사실에서 여성이 정치참여를 활발하게 주저 없이 나서는 데는 성별에 대한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표 11).

<표 11> 선거과정상의 어려움 첫째요인(당선자)

단위 : 명(%)

구 분	남 성	여 성	전 체
성별에 대한 편견	-	9(30.0)	9(10.3)
자금부족	28(49.1)	9(30.0)	37(42.5)
선거활동지원 인력 부족	17(29.8)	5(16.7)	22(25.3)
공천의 어려움	2(3.5)	3(10.0)	5(5.7)
정당의 미흡한 지원	4(7.0)	2(6.7)	6(6.9)
시민단체의 지원부족	-	1(3.3)	1(1.1)
여성단체의 지원부족	-	1(3.3)	1(1.1)
상대후보로부터의 인신공격과 비방	3(5.3)	-	3(3.4)
중립적이지 못한 선거관리위원회	2(3.5)	-	2(2.3)
기타	1(1.8)	-	1(1.1)
계	57(100.0)	30(100.0)	87(100.0)

선거과정상에서 어려움을 낙선자집단을 통하여 살펴볼 경우 남성에서 자금부족에 59.4%가 지적을 하였고, 여성의 경우 성별에 대한 편견에 53.3%, 자금부족에 33.3%가 지적을 하여 당선자에서 나타났던 성별에 대한 편견 비율이 낙선자에게서는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12).

<표 12> 선거과정상의 어려움 첫째요인 (낙선자)

단위 : 명(%)

구 분	남 성	여 성	전 체
성별에 대한 편견	-	16(53.3)	16(25.8)
자금부족	19(59.4)	10(33.3)	29(46.8)
선거활동지원 인력 부족	6(18.8)	1(3.3)	7(11.3)
공천의 어려움	2(6.3)	3(10.0)	5(8.1)
정당의 미흡한 지원	2(6.3)	-	2(3.2)
상대후보로부터의 인신공격과 비방	3(9.4)	-	3(4.8)
계	32(100.0)	30(100.0)	62(100.0)

$$\chi^2=27.529 \text{ df}=5 \text{ p}=0.000$$

3) 지방선거에서 당선하기 위한 중점적 활동과 정치교육이 도움정도 비교

제2차 지방선거당시 당선을 위한 중점활동으로는 가장 많은 응답이 지역봉사활동에 51.0%가 지적을 하였다. 다음은 이미지관리 및 홍보에 23.8%, 조직관리에 8.6%가 지적을 하였다. 후보자들은 지방선거에서 당선하기 위해 지역봉사활동에 중점을 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선거중점활동을 당선자만을 분리하여 살펴보면, 남성당선자의 경우 응답자의 58.6%가 지역봉사활동에 중점을 두었다고 하였으며, 여성당선자의 경우 이미지관리 및 홍보에 33.3%, 지역봉사활동에 30.0%가 지적을 하여 여성당선자에서는 이미지관리 및 홍보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반적인 후보자에서 나타난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13).

<표 13> 제2차 지방선거당시 당선을 위한 중점 활동 (당선자)

단위 : 명(%)

구분	남성	여성	전체
지역 봉사 활동	34(58.6)	9(30.0)	43(48.9)
조직 관리	7(12.1)	1(3.3)	8(9.1)
이미지 관리 및 홍보	16(27.6)	10(33.3)	26(29.5)
시민 단체 활동	-	3(10.0)	3(3.4)
여성 단체 활동	-	1(3.3)	1(1.1)
전문가집단과의 연계 활동	1(1.7)	4(13.3)	5(5.7)
기 타	-	2(6.7)	2(2.3)
계	58(100.0)	30(100.0)	88(100.0)

조사응답자에게 선거전에 정치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정치교육경험이 있는 사람이 44.3%이고 나머지 55.7%는 정치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별로는 여성의 경우는 55.0%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남성은 37.1%만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앞에서 응답한 내용을 당선자만을 분리하여 살펴볼 경우 정치교육 경험은 당선자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당선자집단에서는 정치교육 경험이 48.3%인 것과 비교하면, 낙선자집단에서는 정치교육경험이 38.7%로 당선자집단에서 정치교육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여성정치인의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로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본다(표 14).

<표 14> 선거전 정치교육경험유무 (당선자)

단위 : 명(%)

구 분	남 성		여 성	
	당 선 자	낙 선 자	당 선 자	낙 선 자
경 험	24(42.1)	9(28.1)	18(60.0)	15(50.0)
무 경 험	33(57.9)	23(71.9)	12(40.0)	15(50.0)
계	57(100.0)	32(100.0)	30(100.0)	30(100.0)

$$\chi^2=2.521 \text{ df}=1 \text{ p}=0.112$$

지방선거전 정치교육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교육이 선거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알아보았다. 응답자 중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전체응답자의 72.4%로 선거전 정치교육이 도움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응답을 당선자만을 분리하여 살펴볼 경우, 정치교육이 선거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76.6%를 차지하여 당선자와 비당선자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의 72.4%보다 높은 비율이다. 따라서 정치관련 교육이 당선자에게서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15).

<표 15> 교육이 선거에 도움을 준 정도(당선자·교육경험자)

단위 : 명(%)

구 분	남 성	여 성	전 체
아주 많은 도움이 됨	7(25.9)	3(15.0)	10(21.3)
조금 도움이 됨	15(55.6)	11(55.0)	26(55.3)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함	4(14.8)	5(25.0)	9(19.1)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함	1(3.7)	1(5.0)	2(4.3)
계	27(100.0)	20(100.0)	47(100.0)

$$\chi^2=1.313 \text{ df}=3 \text{ p}=0.726$$

4) 여성후보자에 대한 유리한 요인과 불리한 요인

선거과정에서 여성후보자이기 때문에 유리한 점이 있는가에 대하여 여성후보자에게만 알아본 결과, 유리한 점이 있다는 응답이 45.6%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응답을 여성당선자에게만 한정할 경우 73.1%가 유리한 점이 있다라고 응답을 하였다(표 16).

<표 16> 여성이기 때문에 유리한 점 유무(여성당선자)

단위 : 명(%)

구 분	응답자수	응답비율
유리한 점 있음	19	73.1
유리한 점 없음	7	26.9
계	26	100.0

여성이 유리한 점이 있다라고 한 응답자에게 유리한 점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알아본 결과, 총 30명의 응답자를 분석하여 보면, 가장 많은 응답은 ‘참신하고 알뜰한 이미지’로 66.7%이고, 다음은 ‘유권자들과의 접촉이 유리함’13.3%, ‘여성유권자들의 여성후보에 대한 지지’, ‘매스컴의 지원’에 각각 6.7%이다. 여성후보가 갖는 선거장벽이 많이 있음에도 여성만이 가질 수 있는 장점으로 참신하고 알뜰한 이미지가 선거에 유리한 점이라는 것은 정치문화의 혼탁함 속에서 유권자를 상대로 한 선거전에서 여성후보자가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요인으로 여성이 활용할 수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선거과정에서 남성과 비교하여 불리한 점이 있는가에 대하여 여성응답자만이 응답하도록 한 결과 75.0%가 불리한 점이 있다고 응답을 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당선자와 비당선자로 구분하여 살펴볼 경우 비당선자에게서 불리한 점이 있다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당선자집단에서는 70.4%가 불리한 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비당선자 집단에서는 79.3%가 응답을 하여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위와 같은 남성보다 불리하다라는 점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알아보면, 남성선호경향 40.9%로 가장 많이 지적하였고, 재정 능력이 부족

27.3%, 정치하는 여성을 부정적으로 보는 현상 20.5% 등으로 정치활동에 입문하는 선거에서 불리한 점으로 남성이배적인 문화에 익숙해 있는 기존의 문화가 불리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덧붙여 재정능력의 부족도 간과할 수 없는 정도의 요소로 작용한다(표 17).

<표 17> 남성보다 불리한 점(여성응답자)

		단위 : 명(%)	
구 분	응답자수	응답비율	
남 성 선 호 경 향	18	40.9	
후색선전 등에 대한 대처능력 취약	3	6.8	
정치하는 여성을 부정적으로 보는 현상	9	20.5	
재 정 능 력 이 부 족	12	27.3	
선거경험이 없기 때문	2	4.5	
계	44	100.0	

다음은 여성들은 선거자금을 어떻게 충당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알아보면 가장 많은 비율은 본인의 동산 및 부동산으로 지적하였다. 이는 남성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여성후보자에게 남성후보자와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은 배우자 및 자녀의 도움에서 26.2%를 차지하는 응답에 비하여, 같은 응답내용에 남성은 4.5%에 불과한 응답비율이라는 점이다. 이를 통해서 여성후보자는 본인의 동산 및 부동산과 함께 배우자 및 자녀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표 18).

<표 18> 선거자금 충당 방법

단위 : 명(%)

구 분	남 성	여 성	전 체
본인의 동산 및 부동산	63(70.8)	32(52.5)	95(63.3)
배우자 및 자녀의 도움	4(4.5)	16(26.2)	20(13.3)
친척 및 친구의 도움	13(14.6)	4(6.6)	17(11.3)
정 당 지 원 금	1(1.1)	2(3.3)	3(2.0)
사 회 단 체 지 원 금	-	3(4.9)	3(2.0)
은 행 용 자	5(5.6)	3(4.9)	8(5.3)
후원회 및 주민 지원	2(2.2)	1(1.6)	3(2.0)
기 타	1(1.1)	-	1(0.7)
계	89(100.0)	61(100.0)	150(100.0)

5) 여성후보자가 인식한 유권자들의 태도

여성후보에 대한 유권자들의 태도는 어떠하다고 보는가에 대하여 가장 많은 응답분포를 보인 것은 ‘별차이 없음’의견으로 38.5%이다. 다음은 ‘상대적으로 부정적’이라는 의견이 36.3%, ‘상대적으로 호의적’이라는 의견이 25.2%이다. 그런데 남녀별로는 의견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데, 여성후보에게 상대적으로 호의적이라는 의견은 남성응답자보다 여성후보자에게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선거에 출마하여 여성후보자가 선거활동을 하면서 자신에게 호의적 태도를 보인 유권자가 많았음을 보여준다. 이는 여성후보자에게 불리한 점이 있다라는 응답과는 배치되는 듯이 보이는 응답이다. 그러나 이러한 응답이 나타나는 원인을 다음의 분석에서 알 수 있다. 즉, 응답자 집단을 당선자와 낙선자로 구분하여 당선자집단의 여성응답자가 상대적으로 호의적이라는 응답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데, 당선한 여성에게 있어서는 여성후보자에게 호의적으로 나타나는 유권자의식이 당선에 유리하였음을 보여주는 응답이다. 이를 통하여 여성후보자는 남성지배적 정치활동의 장에서 여성후보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이미지의 적극적 활용이 선거에서 승리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표 19).

<표 19> 여성후보에 대한 유권자들의 태도에 대한 의견(당선자/낙선자)

단위 : 명(%)

구 분	당선자 *			낙선자 **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상대적으로 호의적	4(8.5)	19(59.4)	23(29.1)	5(19.2)	6(20.0)	11(19.6)
별 차 이 없 음	21(44.7)	9(28.1)	30(38.0)	13(50.0)	9(30.0)	22(39.3)
상대적으로 부정적	22(46.8)	4(12.5)	26(32.9)	8(30.8)	15(50.0)	23(41.1)
계	47(100.0)	32(100.0)	79(100.0)	26(100.0)	30(100.0)	56(100.0)

* $\chi^2=21.101$ df=2 p=0.000

** $\chi^2=2.677$ df=6 p=0.262

6) 여성후보자의 단체활동과 선거관계 분석

제2차 지방선거당시 후보자들의 단체활동에 대하여 알아보면, 후보자 자신이 소속단체내에서 지도자적 지위에 있었다는 비율은 62.3%로 반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지도자적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응답은 23.3%이고, 단체에 소속하지 않았다는 비율은 14.4%이다. 이는 남녀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비율이다.

그러면, 62.3% 가 단체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단체활동과 선거지원과의 관계를 보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즉, 여성후보자의 경우 62.8%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반면, 남성의 경우는 76.9%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을 하여 차이를 보여준다. 단체활동을 하면서 선거에 도움을 받는 정도에 있어서 여정보다 남성에게서 높게 나타난 사실에서 여성들이 보다 더 단체활동내에서 지원을 끌어들이 필요 있다고 본다(표 20).

<표 20> 소속단체의 선거지원 정도

단위 : 명(%)

구 분	남 성	여 성	전 체
매우 적극적으로 도움	18(27.7)	16(37.2)	34(31.5)
약간 적극적으로 도움	32(49.2)	11(25.6)	43(39.8)
보 통	9(13.8)	9(20.9)	18(16.7)
별로 도와주지 않음	2(3.1)	6(14.0)	8(7.4)
전혀 도와주지 않음	4(6.2)	1(2.3)	5(4.6)
계	65(100.0)	43(100.0)	108(100.0)

$\chi^2=10.112$ df=4 p=0.039

소속단체의 지원정도를 당선자집단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매우 적극적으로 도움’의 응답이 47.6%로 높아지는 데 당선자와 비당선자를 구분하지 않을 때 37.2%를 차지하는 것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여성후보자의 경우 선거에서 득표하는 데 소속단체가 크게 도움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다.

3. 지방의회의원 당선 후 활동분석

1) 의정활동수행 분석

여성후보자가 당선을 한 경우, 당선요인으로 가장 많이 지적하는 것은 여성인 점이 유리하게 작용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여성응답자의 38.7%가 지적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효율적인 선거운동방법의 활용, 그리고 정당의 지원이 꼽힌다. 또한 여성후보자가 낙선한 경우 낙선요인으로 가장 많은 응답이 여성인 점이 부정적으로 작용으로 46.7%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나타나는 응답은 자금부족에 26.7%가 지적을 하였다. 여성후보자의 경우 당선과 낙선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데는 성별요인이 크게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여성후보자가 당선 후 의정활동에서 남성 당선자와는 어떠한 차별성을 보이는 것일까? 이에 대한 분석으로는 의

정활동 수행을 위한 노력을 살펴본다. 남녀당선자가 당선 후 의정활동 수행을 더욱 잘 하기 위해서 한 일로는 당선자가 가장 많은 응답을 한 것은 '선배의원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의정활동 경험 공유'로서 25.0%이다. 그리고 '의정활동과 관련된 교육훈련참가'도 23.8%, '정당과의 연계구축' 16.7%, '전문가집단과의 연계활동' 14.3%, '여성단체와의 연계활동' 13.1%이다. 이를 남녀를 구분하여 보면, 남성의 경우에는 선배의원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의정활동경험 공유가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인 반면, 여성의 경우는 여성단체와의 연계활동에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이는 것은 차이점으로 나타난다. 또한 정당과의 연계구축 면에서는 남성응답자의 21.8%에 비하여, 여성응답자에서는 6.9%로 당선자의 의정활동에의 접근방법은 남성과 여성이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남성의 경우는 남성이 다수인 선배의원과의 네트워크와 교육훈련참가, 정당과의 연계구축에 다수응답이 나타나는 반면, 여성의 경우는 여성단체와의 연계활동과 교육훈련참가, 선배의원과의 네트워크 등의 순으로 나타나, 여성들의 경우는 여성들만의 인적네트워크에 한정된 활동으로 의정활동 수행을 대비하고 있는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표 21).

<표 21>남녀당선자의 당선 후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노력 유형

단위 : 명(%)

구 분	남 성	여 성	전 체
선배의원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의정활동경험 공유	16(29.1)	5(17.2)	21(25.0)
여성 단체 와 의 연계 활동	3(5.5)	8(27.6)	11(13.1)
정 당 과 의 연계 구축	12(21.8)	2(6.9)	14(16.7)
의정활동과 관련된 교육훈련 참가	13(23.6)	7(24.1)	20(23.8)
전 문 가 집 단 과 연계 활동	8(14.5)	4(13.8)	12(14.3)
기 타	3(5.5)	3(10.3)	6(7.1)
계	55(100.0)	29(100.0)	84(100.0)

$\chi^2=11.351$ df=7 p=0.045

또한,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된 의원에게 지방의회에서의 상임위원회 선호도를 물었다.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는 건설/교통분야로서 32.6%이다. 다음으로는 보건사회분야 18.0%, 환경수자원관련분야 14.6%, 교육분야 11.2%, 내무/치안분야 9.0%로 나타났다. 그런데 남녀

를 분리하여 살펴보면,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분야인 건설/교통분야는 남성이 43.9%인 반면, 여성은 12.5%이고, 보건사회분야는 남성은 7.0%인 반면, 여성은 37.5%이다. 또한, 내무/치안분야는 남성이 14.0%가 응답한 반면, 여성은 응답자가 없었다. 상임위원회 선호도에서 남성과 여성간에는 기호를 달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22). 여성들의 경우는 보건사회분야와 환경수자원관련분야에서 활동하기를 희망하는 의원이 다수인데, 여성들의 경우 여타 분야로의 관심의 범위를 확대하는 일이 필요하다.

<표 22> 지방의회에서의 상임위원회 선호도

구분	단위 : 명(%)		
	남성	여성	전체
환경/수자원관련분야	7(12.3)	6(18.8)	13(14.6)
재정/경제분야	4(7.0)	2(6.3)	6(6.7)
보건사회분야	4(7.0)	12(37.5)	16(18.0)
건설/교통분야	25(43.9)	4(12.5)	29(32.6)
교육분야	5(8.8)	5(15.6)	10(11.2)
내무/치안분야	8(14.0)	-	8(9.0)
문화분야	3(5.3)	1(3.1)	4(4.5)
기타	1(1.8)	2(6.3)	3(3.4)
계	57(100.0)	32(100.0)	89(100.0)

남녀지방의회의원에게 여성위원이 여성이기 때문에 가지는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는가를 물어보았다. 여성의원 자신의 응답으로는 58.1%, 남성의원으로부터는 36.0%가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있었다.

애로사항의 내용으로는 여성위원의 자신의 응답으로는 '남성의원주도의 지방의회 운영'이 48.0%로 가장 많고, 남성위원의 의견으로는 '의회활동이외의 인간관계형성곤란'이 37.5%로 가장 많은 의견이다. 그리고 여성위원의 응답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이 '주요직위에서의 제외'로서 32.0%이다. 다음은 '의회활동이외의 인간관계형성곤란'이 20.0%이다.

남성위원의 의견으로 두 번째로 많은 것은 ‘남성위원 주도의 지방의회 운영’으로 25.0%이며, 다음은 ‘지방주민과의 연계 어려움’이 12.5%이다 (표 23). 여성위원의 어려움을 남성위원에게도 의견을 물은 결과로 여성위원이 느끼는 것 이외에도 동료인 남성위원이 관찰 할 수 있는 고충으로 ‘의회활동이외의 인간관계형성곤란’등을 지적한 것은 여성의 고충을 이해하는 데 큰 요소이다. 여성이 지방의회를 비롯한 사회전반의 남성주도문화에서 주류화되기 위해서는 구성원과의 인간관계형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이 문제에서 여성이 애로를 가진다는 것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된다.

<표 23> 여성위원이 가지는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남녀당선자의 의견)

단위 : 명(%)

구 분	남 성	여 성	전 체
남성위원 주도의 지방의회 운영	4(25.0)	12(48.0)	16(39.0)
주요 직위에서의 제외	1(6.3)	8(32.0)	9(22.0)
의회활동 이외의 인간관계형성곤란	6(37.5)	5(20.0)	11(26.8)
지방주민과의 연계 어려움	2(12.5)	-	2(4.9)
기 타	3(18.8)	-	3(7.3)
계	16(100.0)	25(100.0)	41(100.0)

2) 재출마의사를 통하여 본 여성후보자의 정치활동만족도

제2차 지방선거 후보자로 선거를 치른 조사응답자에게 제3차 지방선거에도 출마할 것인가를 물었다. 출마예정자는 62.4%로 나타났다. 그리고 재출마의사가 없음을 밝힌 응답자는 13.4%이다. 전체적으로는 정치활동에 대한 만족도에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재출마할 것이라는 응답자가 재출마를 위해 준비하는 것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가장 많은 응답이 ‘지역봉사활동’으로 29.5%이고, ‘전문가집단 및 지역주민과의 연계를 통한 적극적 의정활동’이 26.7%, ‘정당과 연계를 통한 지지기반 확보’에 25.7%가 응답을 하였

다. 이러한 응답은 남녀를 구분하여 보면, 정당과의 연계를 통한 지지기반 확보는 남성 26.6%, 여성 24.4%로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지역봉사활동에서 남성 35.9%, 여성 19.5%, 여성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지지기반 확보에 남성 1.6%, 여성 19.5%라는 응답비율로 단체활동을 통한 지역봉사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활동기반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24).

<표 24> 재출마를 위해 준비하는 주요내용

단위 : 명(%)

구 분	남 성	여 성	전 체
선배의원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지지기반 확보	3(4.7)	-	3(2.9)
여성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지지기반 확보	1(1.6)	8(19.5)	9(8.6)
정당과 연계를 통한 지지기반 확보	17(26.6)	10(24.4)	27(25.7)
전문가집단 및 지역주민과의 연계를 통한 적극적 의정활동	17(26.6)	11(26.8)	28(26.7)
지역봉사활동	23(35.9)	8(19.5)	31(29.5)
기 타	3(4.7)	4(9.8)	7(6.7)
계	64(100.0)	41(100.0)	105(100.0)

$\chi^2=12.434$ df=5 p=0.029

4. 여성의 정치참여확대방안 의견

남녀후보자에게 여성이 전문직에 진출하는 데 가장 큰 장애요인을 무엇이라고 보는지에 대하여 의견을 알아본 결과, 남성응답자 중 가장 많은 응답은 ‘여성이 남성과 비교하여 열등하다는 사회적 편견’에 32.9%이고, 다음으로는 ‘여성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미흡’에 23.3%, ‘여성스스로의 노력부족’에 21.9%, 그리고 ‘자녀 및 가사문제’에 19.2%가 지적을 하였다. 여성응답자는 가장 많이 지적한 응답이 ‘여성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미흡’으로 32.8%, 다음으로는 ‘여성이 남성과 비교하여 열등하다는 사회적 편견’에 31.1%, ‘여성스스로의 노력부족’에 24.6%가 지적을 하였다(표 25). 응답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여성이 전문직에 진출하는 데 장애요인으로는 사회적 편견, 여성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미흡, 여성의 노력부족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사회적 편견과 여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장치의 미흡이라는 두 요소는 전자를 제거하기 위해 후자가 필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지적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서 50%~60% 응답률을 차지하는 것을 볼 때 여성의 전문직 진출은 근본적으로는 여성에 대한 편견을 해결하려는 사회적 노력이 부족했음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갈 때 여성의 정치활동 진출은 가능하리라 본다.

<표 25> 여성이 전문직 진출에 가장 큰 장애요인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구 분	남 성	여 성	계
여성이 남성과 비교하여 열등하다는 사회적 편견	24(32.9)	19(31.1)	43(32.1)
자녀 및 가사문제	14(19.2)	5(8.2)	19(14.2)
여성스스로의 노력부족	16(21.9)	15(24.6)	31(23.1)
여성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미흡	17(23.3)	20(32.8)	37(27.6)
교육 및 훈련기회 미흡	2(2.7)	2(3.3)	4(3.0)
계	73(100.0)	61(100.0)	134(100.0)

$$\chi^2=4.078 \text{ df}=4 \text{ p}=0.396$$

현재의 우리나라의 정치문화 수준에서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이 어려운 실정임을 인식함을 전제하고 이의 극복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보는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조사응답자 중 가장 많은 응답은 ‘여성정치인력 양성’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여 33.6%가 지적하였다. 다음으로는 ‘지역구 여성공천할당제 도입’에 24.5%, ‘중·대 선거구로의 선거구 개편’에 16.1%, 그리고 여성정치기구 확보,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 여성정치세력의 결집 등에는 10%미만의 산발적 의견 분포가 있다.

남녀전체의 의견을 남녀를 분리하여 보았을 경우, 의견의 차이가 나타나는 데($p=0.004$), 남성응답자에서 가장 많은 응답은 ‘여성정치인력의 양성’으로 42.0% 인데 반하여, 여성응답자에서 가장 많은 응답은 ‘지역구 여성공천할당제 도입’으로 35.5%를 차지한다. 이러한 응답으로 미루어 보아 남성은 여성정치인력의 부족을 여성이 지방의회에 보다 많이 진출하는 데 제약요인으로 보고 있으며, 여성응답자는 지역구에서의 여성공천할당제를 통한 정치권의 의지가 여성이 지방의회에 보다 많이 진출하는 데 필요한 요인이라고 보는 것이다.

또한, 조사응답자에게 여성정치인력을 양성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라고 보는 가에 대하여 의견을 물었다. 조사응답 분포는 정당, 여성단체, 여성교육기구의 역할 내용에 고른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가장 많은 응답으로는 정당의 여성인력양성기능강화에 33.1%를 비롯하여 여성단체의 여성인력양성기능강화, 여성교육을 전담하는 정부기구설치에 각각 30.3%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남녀간의 의견은 차이를 보이는 데($p=0.038$), 남성응답자는 ‘여성단체의 여성인력양성기능강화’를 가장 많이 지적하였으며(38.3%), 여성응답자는 ‘여성교육을 전담하는 정부기구설치’에 가장 많은 응답(41.0%)을 하였다(표 26). 즉, 여성인력을 양성하는 방법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하고 있는 것은 여성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는 여성에게 필요로 되고 있는 인력개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함과 아울러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26> 여성정치인력 양성에 효과적인 방법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구 분	남 성	여 성	전 체
정당의 여성인력 양성기능 강화	26(32.1)	21(34.4)	47(33.1)
여성단체의 여성인력양성기능 강화	31(38.3)	12(19.7)	43(30.3)
여성교육을 전담하는 정부기구 설치	18(22.2)	25(41.0)	43(30.3)
기 타	6(7.4)	3(4.9)	9(6.3)
계	81(100.0)	61(100.0)	142(100.0)

$\chi^2=8.417$ df=3 p=0.038

IV. 외국여성의 정치적 지위와 지원정책

IPU가 전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2003년 3월 현재국회의원 중 여성 하원의원 평균 비율은 14.9%인데, 한국은 6.2%이다. 또한 조사에 응한 181개국 중 여성의원의 비율 순위는 한국이 100위이다. 2003년 3월 현재 여성의 국회(하원)참여가 30% 이상 되는 나라는 전세계국가 중 스웨덴(45.3%), 덴마크(38.0%), 핀란드(37.5%), 네덜란드(36.7%), 노르웨이(36.4%), 쿠바(36.0%), 코스타 리카(35.1%), 아이슬란드(34.9%), 오스트리아(33.9%), 독일(32.2%), 아르헨티나(30.7%), 모잠비크(30.0%)가 있다.⁷⁾ 지방의회의 경우에 있어서도 전세계 여성의원 비율은 우리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스웨덴이 41.3%로 가장 높고, 노르웨이, 핀란드, 오스트리아 등의 국가는 30% 이상 ~ 40%까지, 미국, 영국, 독일, 뉴질랜드 등의 국가는 20%이상 ~ 30%까지, 호주, 캐나다, 벨기에, 프랑스 등의 국가는 10% 이상 ~ 20%까지 차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여성의 정치참여가 높은 외국의 주요 국가들은 여성의 평등한 정치적 참여가 여성발전 뿐 아니라 전체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인식 하에 비례대표제 및 정당공천할당제를 도입하고 점진적 목표율을 설정하고 추진해 나갔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의 정치교육이나 선거활동지원 등의 특별조치를 채택하고 여성의 정치참여를 장려 해 온 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외국사례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스웨덴, 프랑스, 영국 등의 국가를 중심으로 살

7) <http://www.ipu.org/wmn-e/classif.htm>

펴보고자 한다.

1. 스웨덴

스웨덴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회에서 많은 여성들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정치를 할만한 여성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스웨덴 여성의 정치참여가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것은 그들의 선거제도와 밀접한 관련 속에 놓여 있다. 다당제와 명부식 비례대표제로 공직자를 뽑는 선거는 양당제도의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에 비해서 여성후보의 대거 당선에 훨씬 유리하다. 스웨덴의 선거제도는 혼합형인데 전체 의원 349명 중 310명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도이며 29개의 선거구별로 투표가 진행된다. 나머지 39명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이지만 전국이 하나의 선거구로 되어있다. 당내 민주주의가 정착이 되면서 정당명부의 후보지명은 공개회의에서 이루어지게 되었고 어떤 당원이라도 다른 당원을 지명할 수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이익집단과 단체들, 그리고 당내 여성조직과 페미니스트 그룹들은 점점 정당과 후보지명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고 특히 지방정치에서는 이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였다. 선거제도에서 중요한 것은 유권자는 정당에 투표하는 것이지 개별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정치신인과 같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후보도 공천을 받게 되면 다수대표제에서와 같은 불리함을 겪지는 않는다. 후보지명과 후보의 명부는 주로 정당에 의해서 통제되는데 정당들은 당내 여성조직 및 페미니스트 그룹들의 영향을 받으며, 또한 법제도에 따라서 여성에게 과반수를 공천하고 있다.⁸⁾

스웨덴에서 근대적 정당제도가 정착된 것은 1920년대 초부터인데 이때부터 스웨덴에는 사민당, 좌파정당, 온건파, 자유당과 중도파의 5개 정당을 가지고 있었다. 1988년에 여기에 녹색당이 합해져서 중요 정당 6개로 구성된 다당제이다. 총선은 4년에 한 번씩 9월 3번째 일요일에 이루어지고 같은 날에 지방의회와 시의회 선거도 있다.

스웨덴은 연방제국가로서 23개의 지역(län)과 288개의 시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단위에는 의회를 가지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의회

8) 김원홍·장영아·김민정·박의경(2001), 「ASEM 회원국의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여성참여 증진에 관한 연구」, 서울 : 한국여성개발원, pp.203-220 참조.

에서 임명한 지방정부를 가지고 있다. 남녀의 투표율은 매우 높아서 90%에 가깝다. 스웨덴 의회에서의 여성의 비율은 다른 국가들에게 좋은 표본이 된다. 국제의원연맹(IPU)에 보고된 국가들 가운데 여성의 비율이 가장 높은 의회를 가진 국가가 바로 스웨덴으로서 여성의 비율이 45.3%이다. 전체 349명의 의원 가운데 여성의원은 158명이다.

지방선거에서도 여성의원의 비율은 이와 비슷하다. 지난 1998년 선거에서 전체 지역의회 의원 1,646명 가운데 여성의원은 789명이 당선되었다. 한편 시의회의 경우에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선거에서 여성의원은 전체 11,006석 의석가운데 41.2%인 4533석을 차지하였다. 지방의회의원에게 있어서도 유럽연합국가들 가운데 가장 많은 여성의원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스웨덴에서 정부 및 정당이 수행하는 여성후보 지원정책으로는 첫째, 명부에서의 여성일정비율 할당제를 들 수 있다. 스웨덴은 입법을 통한 할당제는 시행하지 않고 있지만 정당별로 명부에서의 할당을 시행하고 있다. 사민당, VP, MpG는 명부에서 50%의 여성을 할당하고 있다. 중앙당의 경우에는 40%를 할당하고 있다. 특히 스웨덴의 가장 큰 정당인 사민당은 여성후보를 할당하는데 있어서 남녀를 번갈아 명부에 두는 지퍼제(Zipper System)로 명부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둘째, 여성정치인리더십교육을 들 수 있다. 스웨덴의 여성시민단체 및 정당내 여성조직은 여성정치인들의 리더십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정치에서 만나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자세 및 정치의 과정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들을 익히게 하고 실질적인 기술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후보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숫적인 할당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치에 필요한 여성을 길러내는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셋째, 멘터링 프로그램(Mentorship Program)의 운영이다. 여성정치인의 양성에 있어서 여성이든 남성이든 여성정치후보를 위해 좀더 나이가 많고 경력이 높은 정치인이 새로 충원된 여성들을 지원하고 도와주는 멘터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⁹⁾

9) 비르기타 리델(1994), “지방정치와 여성의 참여확대를 위한 스웨덴 여성단체의 역할” 「여성연구」, 통권 제45호, 겨울호, 한국여성개발원, p. 42.

2. 프랑스

선거구 절대다수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1차 투표에서 50%이상 득표한 후보자가 없을 경우 12.5% 이상 얻은 후보자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 최고득표자가 당선자로 확정되는 재투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하원은 임기 5년, 상원은 9년이다. 지방의회의 경우 레중의회(예 : 영남권 의회, 호남권 의회)는 대선거구 비례대표제, 데파르트망 의회(예 : 경기도, 강원도)는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 코뮌의회(시, 읍, 면) 중 인구 3500명미만인 지역구는 소선거구 단순다수투표제를, 인구 3500명 이상인 지역구는 대선거구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의 임기는 6년이다. 2000년 6월 프랑스에서는 여성의 정치참여가 확대되어야 국가발전이 가능하다는 인식 하에 2000년에 각급 선거의 후보에 여성을 50% 공천토록 하는 남녀동수 공천법을 통과시켰고, 만일 남녀동수 공천법을 어길시 정부가 그 비율을 지키지 못한 정당에 대해서는 지역구의 경우 국고보조금을 삭감하고, 비례대표제의 경우 과반수에서 2%만 미달되어도, 선관위에서 접수를 거부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이 개정되었다.

그 결과 2001년 3월 11일, 18일 양일간에 걸친 프랑스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적용된 남녀동수 공천법이 위력을 발휘하여, 주민 1만5000명 이상의 코뮌에서 여성시장이 44명이 배출되었고(이전 33명). 또 인구 3,500명 이상의 코뮌도시의 경우 여성의원 비율은 평균 47.5%로 지난 지방선거의 평균 비율 22%에 비하여 25% 포인트 이상 월등 높게 나타났다. 2002년 6월 9일, 16일 실시한 프랑스 총선에서 중도우파가 총 577석 중 대통령여당연합(UMP)이 3백55석을 획득하는 등 중도우파가 반수를 훨씬 웃도는 3백99석을 차지하였고, 중도좌파인 사회당(1백47석)과 공산당(21석), 녹색당(3석) 등 좌파는 1백7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정당별 남녀 후보 동수 규정이 처음으로 적용된 2002년 총선에서 여성 후보들은 1차 투표에서는 총 8,400여명 중 3,200여명(38%), 2차 투표에서는 1,045명 중 250여명(23.9%; 사회당 31.2%(115명), 대통령여당연합 19.6%(89명))이 여성 입후보자였다. 이중 여성당선자수는 71명

(12.3%)으로 지난 1988, 1993, 1997년 의회에 진출했던 여성이 각각 33명, 35명, 63명이었던 것과 비교하여 다소 늘어났지만, 여성 정치인 저변 부족, 당선 위주 공천 전략 등으로 인해 남녀동수 규정 입안자인 사회당과 대통령여당연합(UMP)조차 이 규정을 지키지 못해 여성 정치 참여 촉진 취지의 빛이 퇴색되었다. 프랑스의 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으로는 첫째, 남녀동수 공천법을 들 수 있다. 선출직의 여성증진 정책은 선거법의 개정이다. 실질적으로 선거에서 각 정당들이 남녀동수의 후보를 공천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니콜 페리 여권 담당차관은 각종 선거에서 적어도 후보 수준에서는 남녀동수를 보장하도록 하는 법안을 의회에 상정하여 통과시킴에 따라 2001년 지방선거부터 각종 선거에서 각 정당들은 남녀동수의 후보를 공천해야만 한다. 이 법에 따르면 남녀후보가 같은 수로 되어 있지 않은 후보 명부는 선관위가 아예 접수를 거부하게 되며 소선거구제로 치러지는 하원의원 선거에서는 공천자에 남녀동수 원칙을 지키지 않은 정당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급하는 정당보조금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정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점으로 2002년 6월 실시한 총선에서 정권을 획득한 중도우파의 경우나 야당이 된 사회당의 경우도 50%에 미치지 못하는 여성후보를 공천하여 여성당선자수는 71명(12.3%)에 불과하였는데, 현재 프랑스는 남녀동수법을 지킨 정당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의 삭감이외에도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둘째, 남녀동등감시소(Secrétariat de l'Observatoire de la Parité entre les hommes et les femmes)를 들 수 있다. 이 기구는 베이징회의 이후 1995년 국무총리산하에 마련된 기구로서 1998년 그 기능이 확대되었다.¹⁰⁾ 하원의원과 비정부조직의 대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이 기구는 가장 중요한 임무가 국무총리에게 여성정책에 관하여 건의하는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정치, 경제, 사회영역에서 동등한 참여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밝히고 이에 대해 보고서를 제출하는 일도 한다. 이런 활동을 토대로 하여 국무총리에게 성간의 평등과 동등권확립을 위한 정책을 건의하는 일을 하고 있다. 남녀동등감시소는 2001년 9월부터 동

10) 1998년 10월 4일 법령에 의해 이 기구의 권한이 확대되었다. 이 기구는 지난 1999년 9월 도미니크 질로가 작성한 “다양한 투표제도와 정당의 재정에 관한 제안”을 제출하였다.

등권의 확립을 위하여 동등권 의식개선캠페인을 전개해 왔다.

3. 영 국

영국 국회는 하원과 상원 양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원의 임기는 5년이고, 소선거구 최다득표제 방식에 의해 선출된다.¹¹⁾ 영국은 정당 정치의 역사가 깊은 나라로서, 정당체계는 양당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대표적인 정당으로는 2002년 현재 집권당인 노동당과 야당인 보수당이 있다. 영국에서 국회의원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은 미국의 예비선거와는 같지 않으나 지구당내 당원들끼리 경선을 거쳐 선발된 후, 몇 단계의 심사를 거쳐 후보를 결정한다. 정당의 후보자 선출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으나, 각 정당들은 자체내부 선출 규정을 가지고 있다. 노동당이나 보수당 등 대부분의 정당들은, 먼저 중앙당의 후보자선정 위원회가 선거구별로 희망자를 면담하여 유력후보자 명단을 작성하여 지구당에 통보한다. 지구당 후보자 선정위원회(인구 5-6만의 선거구의 경우 50~60명의 위원으로 구성)는 이 명단과 지구당에서 접수받은 신청자 중 후보자의 연설, 능력 검토 및 당원의 투표를 거쳐 예비후보를 선정한다. 중앙당은 지구당에서 선출한 후보가 부적격자라고 판단할 경우에만 거부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중앙당에서 제공한 유력후보자 명단에 들어있지 않은 자가 후보로 선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리고 현역의원의 경우 본인이 은퇴하거나 출마포기를 하지 않는 한 탈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¹²⁾ 영국 하원에서의 여성의원 비율은 1945년이래 1983년까지 약 4% 정도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그 후 1980년대 여성운동의 힘과 더불어 여성들은 후보자로서뿐 아니라, 정당내에서 지도자급 직위를 얻으면서 여성의원 수가 증가하게 되었다. 1983년 당시 하원내 여성의원은 23명, 1987년에는 41명으로 증가하였다. 1992년 총선에서는 여성후보자가 341명 나와 60명(9%)이 당선되어 당선율 17.6%를 차지하였고, 1995년의 보궐선거까지 여성 하원의원은 62명(노동당 39명, 보수당 19명, 자민당 3명, 스코트랜드 독립당 1명)으로서 당시 여성의원 비율은 9.5%였다.¹³⁾

11)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93), 「각국의 선거제도」, pp.65-68.

12) 김원기·김재하(1997), 「영국의 선거 및 정당·정치자금제도-잉글랜드를 중심으로-」, 공무원단기훈련보고자료, pp.47-51.

1997년 총선에서는 3,117명의 후보가 나와 이중 659명이 당선되어 4.7대 1의 경쟁으로 치루어졌다. 이 총선에서 노동당은 419석을 얻어 165석을 차지한 보수당을 누르고 18년만에 재집권하였다. 그 밖에 정당 의석 수는 자유민주당이 46석, 스코트랜드 국민당이 6석, 웨일즈 민족당이 4석, 기타 19석이다. 득표율로는 노동당이 45%, 보수당이 31%, 자민당이 17% 나머지가 7%를 차지하였다. 여성후보자는 전체 382명으로 1992년 총선 때보다 41명 늘었고, 여성당선자 수 또한 두 배나 증가하여 120명(18.2%)이 당선되었다. 2003년 4월 현재, 영국하원의 여성 의원 비율은 17.9%(118명), 상원은 16.4%(117명)이다.

지방의회의 여성참여 비율은 2000년 3월 현재 26.5% 수준이다.¹⁴⁾ 영국의 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으로는 첫째, 정당의 주요 당직에 여성 일정비율 할당을 들 수 있다. 노동당은 1980년 말 이후 전국 전당대회 대의원, 전국집행위원회, 선거구 조직, 지역조직의 대의원, 위원, 사무원 등에 있어 여성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다. 둘째, 각급 선거시 당선가능 선거구에 여성후보 50% 공천 및 노동당 예비후보자 명단에 여성후보 50% 할당제를 들 수 있다. 노동당은 1980년대 말 이래 여성당직자 할당제를 채택한 것 이외에 1990년대 들어와 하원에서의 여성후보할당제 도입에 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로 인해 1994년 '1997년 총선전까지 노령으로 은퇴하는 남성의원의 지역구 위원장의 50%와 승산 가능성이 큰 지역구의 위원장 자리 50%'를 여성에게 할당하는 정책을 통과시켰고,¹⁵⁾ 블레어 총리는 1997년 총선에서 여성후보를 많이 공천하고, 선거운동을 지원해준 준 결과로서 147석의 노동당 당선자중 101명의 여성후보들이 당선되어 당시 부패했던 보수당을 이기고 18년만에 정권을 재창출하게 되었던 것이다. 셋째, 자기 추천제(Self-nomination) 도입이다. 그간 영국 노동당의 당간부나 예비후보자 추천은 지구당이나 노동조합 등의 추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그러다 보니 당관련 조직이나 네트워크에 속하지 않은 여성들 중 능력있는 여성들이 정치에 진입하는 것을 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위하여 여성의 정치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자기

13) 한겨레신문사(1995년 6. 15), 「한겨레 21」 제63호, pp.69.

14) Sarah Dunn(2000. 6), Representation of Women, pp.1-3.

15) 한겨레신문사(1995년 6월 15일), 전개논단, p. 68.

추천제를 도입하였다. 넷째, 여성후보에 대한 선거자금(Emily's List) 지원이다. 영국의 노동당은 미국의 에밀리 리스트와 이름이 같은 에밀리 리스트를 1993년 2월 창설하여 정치자금을 모을 수 없는 초년병 여성정치 지망자의 후원이 되어주고 있다.

V. 지방자치 선출직에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이상으로 우리나라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 현황과 지방선거후보자를 통해 본 여성의 지방자치 진출 촉진 요인을 분석하고, 외국의 사례를 살펴 보았다. 그 결과 우리나라 여성의 지방자치 진출에 있어 후보자 자신의 부단한 노력은 물론, 사회단체와의 연계성, 선거구제도, 법으로 여성의 정치참여를 보장하는 일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아직 정당의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정책은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본 연구결과 2002년에 실시한 제3차 동시지방선거에서 광역의회에 여성의원 비율이 9.2%로 1998년 실시했던 제2차 동시지방선거에서의 여성의원 5.9%에 비하여 1.5배 늘어난 것은 정당법에 비례대표제 50%를 여성으로 하도록 강제조항을 둔 결과의 영향이 컸다. 그러나, 정당법에 지역구 30% 여성공천할당제를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들은 당내 민주화라는 명분하에 경선제를 도입함에 따라 여성들은 지역구 후보로 나서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 특히, 여성후보들은 정치자금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고, 사회단체와의 연계성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었다. 하나 재미있는 것은 여성들은 지방선거에서 특히, 여성후보이었기에 당선될 가능성이 컸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아무튼 지방정치가 생활정치로서 터를 잡기 위하여는 보다 많은 여성들의 지방자치 진출이 장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II, III, IV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여기서는 지방자치제 선출직에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1. 선거구제의 개편

우리나라의 선거구제는 국회의 경우 지역구 소선거구제 및 전국구 비례대표제이고, 광역의회 선거구제는 지역구 소선거구제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이고, 기초의회는 소선거구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현행 소선거구제의 경우 사표가 많아 국민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소수 정당이나 신인의 진출을 저해하는 데다, 비례대표의 몫이 점차 줄어들어 직능대표성 및 전문성 확보라는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갈등문제도 심각한 상황이고, 여성의 국회진출도 미약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며, 사회 모든 세력의 정치참여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앞의 외국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국회의 경우 1안)으로 스웨덴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식의 대선선거구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그간 우리의 정치문화상 소선거구제 비례대표제에 익숙해있으므로, 2안)으로 소선거구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소선거구제가 지니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면서, 양대 정당의 이득을 높이기 위하여 소선거구 명부식 비례대표제 50%안의 검토도 요구된다.

지방의회 선거구제의 경우 광역의회의 경우 개선방안으로 시·군·구단위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하는 방안의 도입이 필요하며, 기초의회의 경우 개선방안으로 2개 동을 한 선거구로 하여 유권자가 여성 1명, 남성 1명을 선출하는 1인 2표제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필요하다(표 27 참조).

<표 27> 선거구제 개정(안)

의 회	7선거구제(안)
국 회	제1안) 시·도 단위별 인구수에 비례하여 선출하는 대선거구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제2안) 소선거구제 혼합명부식 비례대표제 50% 도입 : ① 투표방식 : 1인 2투표제 도입 ② 비례대표도입 방식 : 전국구 비례대표제 도입 ③ 의석배분방식 : 의석배분 방식에 있어 지역구는 지역구대로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선출하고, 정당이 얻은 득표율은 비례대표의 당선비율로만 적용토록 함
지방의회	① 광역의회 선거구제 : 시·군·구단위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② 기초의회 선거구제 : 2개 동을 한 선거구로 하여 유권자가 여성 1명, 남성 1명을 선출하는 1인 2표제 방식 채택

2. 광역의회 지역구 30% 여성공천할당제 불이행시 국고보조금 50%까지 삭감 및 30%를 지킨 정당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

오늘날 정당의 주요 기능 중의 하나가 바로 정치엘리트를 발굴하고 충원하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정당들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왔다. 현재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정당법에 여성공천할당제를 도입한 것은 16대 총선시 비례대표제 후보에 있어 여성공천할당 30%를 명시한 것과, 2002년 3월 제3차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의회 비례대표제에 여성공천할당 50%(2인중 1인을 여성으로 함)와 지역구에 여성공천할당 30%를 노력사항으로 명시한 정도이다. 아울러 정당 차원에서 대의원, 당무위원, 부총재 등 주요당직에 여성을 포함하도록 한 정도이다. 이러한 법 조항과 정당의 당헌·당규에 여성공천할당을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명시한 여성공천할당제의 비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다. 한편, 지방선거에 있어서는 광역의회 지역구의 경우 30%이상 여성을 공천하도록 노력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이를 지키는 정당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택하고 있

다. 이는 강력한 조치가 못된다는 지적이 있으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당법에 광역의회 지역구 할당제의 노력사항을 의무사항으로 전환하고 기초자치단체장, 국회의원에도 지역구 할당제를 도입하면서,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 프랑스식으로 정당에 주는 국고보조금을 50%까지 삭감하는 방향으로 정당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30% 여성공천할당을 지킨 정당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정치관계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프랑스에서 남녀동수 공천법에 이행되지 않은 경험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국회의원 비례대표제 여성공천할당제를 현행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고, 불 이행시 선관위에서 접수 불허하는 방향으로 정당법 31조를 개편한다.

3. 정당내 여성후보 지원을 위한 여성정치발전기금 설치

정부는 매년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정당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으로 경산보조금과 선거보조금으로 지급되는데, 계상 근거는 가장 최근에 실시했던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자x800원으로, 2001년 현재 정부가 정당에 지급한 국고보조금 총액은 267억원 정도이다.

2001년 주요정당의 국고보조금은 민주당이 98억원정도, 한나라당이 104억원 정도, 자유민주연합이 56억원, 민주국민당 8000만원, 희망의한국신당이 5000만원 정도이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또는 정당의 후보 추천이 가능한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정당에 선거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급된 경산보조금의 경우 ①인건비 ②사무용품 및 소모품비 ③사무소설치·운영비 ④공공요금 ⑤정당개발비 ⑥당원 교육훈련비 ⑦조직활동비 ⑧선전비 ⑨기타 정당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⑩선거관계비용 등으로 사용하게 되어있으나, 여성정치인 육성경비로는 사용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당해 선거년도에 지급하는 선거보조금의 경우는 후보의 기탁금, 선거지원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 질문에 응하였던 응답자중 제2차 지방선거중 선거과정상에 가장 어려웠던 외부적 요인으로 여성응답자의 경우 성별 편견과 자금부족을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당들은 국고보조금중 일부를 여성정치발전기금으로 설치하여, 여성정치인 육성 및 선

거지원 기금으로 사용토록 한다.

4. 정당내 경선과정에서의 여성의 대표성 확보

현재 우리나라의 정당들은 상향식 공천이라는 명분아래 지구당에서 경선을 통해 승리한 후보가 있는 경우 지구당에서 중앙당에 추천하여 당 후보자로 인정받고 있음. 실제,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의 경우 2002년 제 3차 동시지방선거에서 당의 공천을 받고 출마하려면, 지구당이 후보를 추천하여 당 공천심사특별위원회에서 후보 확정후 당무위원회를 통과하여야 후보가 될 수 있는데, 문제는 후보자의 자질검증과 여성공천할당제의 규정과 어긋난 측면이 있다. 이의 개선을 위하여 영국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영국 노동당처럼 중앙당차원에서 후보자의 자질검증과 여성, 소수 인종이 선출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후보심의상설기구를 설치하고, 지구당에서 복수 추천을 받아 중앙당 차원에서 여성후보를 추천 의무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근본적으로 여성공천할당제의 규정이 지구당의 경선 논리보다 우위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경선제의 경우 대선과 광역자치단체장의 선출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여성후보공천할당제 또한 적용되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는 제외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정서상 국민적 관심이 큰 선거에만 적용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정당의 여성정치지도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여성정치인 인력은행 설치

정당들은 보다 나은 정치 선진국을 구현하고 여성정치지도자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당선자 집단의 경우 정치교육 경험이 48.3%인 것과 비교하면, 낙선자 집단에서는 정치교육경험이 38.7%로 당선자집단에서 정치교육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처럼, 보다 여성후보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

하다. 특히, 여성 청년층에 대한 인턴제도가 필요하며,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우수하게 수료한 여성에 대하여는 중앙당의 임원이나 각급 선거의 후보로 추천하는 등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도 고려되어야 한다. 아울러, 여성정치인 인력은행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6. 총리실 산하에 남녀평등감시소 설치

우리나라도 프랑스처럼 총리실 산하에 남녀평등감시소를 설치하여 정기적으로 정치 및 공직에서의 여성참여를 점검하고, 제대로 지킨 정당이나 기관에 대해 포상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여성의 정치 및 공직참여와 관련하여 동등권 의식개선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도 필요하다.

7. 여성후보와 사회단체와의 연계강화

본 연구결과 조사에 응한 남녀후보자들중 62.3%가 단체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후보자중 62.8%가 단체에서 지원한 선거운동지원이 당선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정치에 나서려는 여성후보들은 사회단체와 연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여성단체들은 여성의 낮은 정치적 지위를 극복하기 위하여 향후 연대하여 수행할 과제로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선거비용이 적게 들고 정당정치의 실현을 위한 대선거구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채택 및 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지역구 여성할당제의 도입을 위한 선거법 개정운동의 지속적인 전개, 둘째, 한 단체에서 일정 수의 여성후보 발굴 및 선거운동까지 지지해주는 멘터링 시스템의 도입, 셋째,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여성유권자 의식교육, 넷째, 공명선거 감시 활동, 다섯째, 언론과의 연계를 통하여 여성후보 홍보활동 강화, 여섯째, 유권자 투표참여하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으로 우리나라의 여성의 지방자치 참여 현황, 후보자 설문조사 및 외국사례를 바탕으로 지방자치 선출직에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여성정책적 차원에서 정당이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하여 여성공천할당제를 정당법에 도입한 것은 2000년 제16대 총선때의 일로 정치권은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 각급 선거의 비례대표제 30% 할당제를 도입하였다. 그 결과 여성국회의원 비율은 5.9%(16명)로 지난 제15대 총선시의 여성의원 비율 3.0%에 비하여 거의 두 배 증가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비례대표제 할당제 도입에 있어 의무 조항을 두지 않다 보니 당시에 30%의 비율을 지킨 주요 정당으로는 민주당 하나에 불과할 정도로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한편, 2002년 3월 정치권에서는 광역의회 비례대표제의 경우 50% 여성공천할당을 두면서 후보 2인중 1인은 여성으로 하도록 의무화 규정을 두었고, 광역의회 지역구의 경우 여성공천 30%를 노력사항으로 두었다. 특히, 광역의회 비례대표제에 여성공천 비율이 늘고, 여성후보들의 자체적인 노력과 함께 여성단체들의 선거지원 결과 광역의회 여성의원 비율은 지난 광역의회 여성의원 수준 5.9%에서 9.2%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최근 정당들은 정당의 민주화라는 명목하에 정당법에 명시된 여성공천

할당제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경선제를 도입하여, 여성들이 후보경선에 나선 경우 상당수가 공천과정에서 탈락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의 개선을 위하여 프랑스처럼 공천할당비율을 지키지 못할 경우 국고보조금을 50%선까지 삭감하는 방향으로 정치관계법의 개정이 필요하고, 지역구 여성후보공천 30%를 지킨 정당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경선과정에서의 여성의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선제는 전국적 규모인 대통령 선거나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구당차원에서 후보를 복수추천하고, 중앙당에 여성공천심사기구를 설치하여 공천할당제에 근거하여 여성후보를 우선적으로 공천해주는 방향으로 정당정책의 개선이 요구된다. 따라서 여성계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확대되도록 정당의 여성공천할당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여성정치인은 물론 여성부, 시민단체, 학계, 매스컴 등과 연대하여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급 공직선거에 여성비율이 확대되어지기 위하여 정당공천할당제가 활성화되어지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특히 정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당은 정권의 쟁취를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국민의 지지가 가장 중요한 만큼, 정당의 여성공천할당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여성공천할당제를 요구하는 여성의 단합된 힘에서 나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민정(1998), 프랑스 여성정치의 현황과 과제, 한국정치학회보, 32집 1호.
김원기·김재하(1997), 영국의 선거 및 정당·정치자금제도-잉글랜드를 중심으로-, 공무원 단기훈련보고자료.
김원홍·김은경(1998), 선거구조 개혁과 여성의 대표성 확보방안 : 한국여성개발원.
김원홍·김혜영·김은경(2000), 정당의 여성당직자 확대방안 : 한국여성개발원.
김원홍·장영아·김민정·박의경(2001), ASEM 회원국의 정책결정과정

- 서의 여성참여증진에 관한 연구 : 한국여성개발원.
- 백영옥(2001. 5. 15), 2002년을 향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방안, 21세기여성정치연합 세미나 발제문.
- 비르기타 리텔(1994), 지방정치와 여성의 참여확대를 위한 스웨덴 여성단체의 역할, 여성연구, 통권 제45호 (겨울호) : 한국여성개발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00),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00), 정당법·정치자금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97), 각국의 회의원 선거·발전연대기 (1992. 7. 1-1994. 6. 30).
- 이범준(1997), 21세기 정치와 여성, 21세기 정치와 여성, 서울 : 나남출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3차 동시지방선거 홈페이지 정리.
- Alan Ware(1996), *Political Parties and Party Systems*. Oxrord : Oxford University Press.
- Appleton Andrew and Amy G. Mazur(1993), Transformation or Modernization : the Rhetoric and Reality of Gender and Party Politics in France Joni Lovenduski and Pippa Norris eds., *Gender and Party Politics*. London : Sage.
- Diane Sainsbury(1993), The Politics of Increased Women's Representation : The Swedish Case in Gender and Party Politics, Joni Lovenduski and Pippa Norris eds., *Gender and Party Politics*. London : Sage.
- UNDP(2002), *Human Development Report 2002*.
- Sarah Dunn(2000. 6), Representation of Women.
<http://www.ipu.org/wmn-/classif.htm>

Policy-making Challenges for Increasing Female Professional Resources: Focusing on Political Field¹⁾

Wonhong Kim, Fellow, KWDI

Musuk Min, Fellow, KWDI

Haeyoung Kim, Senior Researcher, KWDI

Youngmi Kim, professor, Sangmyung university

According to the Human Development Report released by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in 2002, Korea's Human Development Index (HDI) ranks the 27th among 162 countries in the world. Gender Development Index (GDI) takes the 29th place among 146 countries and Gender Empowerment Measures (GEM) holds the 16th among 64 countries. Such revelations show us that even though Korea is very close to the level of advanced countries in terms of human development in both men and women with the improvement of women's education, it still lags behind in the process of gender empowerment now. Considering female lawmaker's ratio in the National Assembly can be used as the best GEM, Korea's marks a poor performance: as of April in 2003, Korea ranks the 100th among 181 countries in this race with accounting for 6.2%, or 17 female lawmakers in the National Assembly. In addition, female local governors are only two, accounting for 0.9% with 63 female members of local government committees (9.2%) and 77 female members of district government committees (2.2%) working currently. Women's poor participation in the political field can be attributed to an

1) This thesis is modified one of "Challenges in Policy in Education Women Expert: Focusing on the Field of Politics and Administration", presented to the Korea Research in 2000 (Main researcher: 김원홍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Research Fellow), Co-researcher: 민무숙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s Research Fellow), 김혜영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s Research Fellow), and 김영미 (Sangmyung University, Professor)

attitude of regarding the politics as men's domain, costly election campaign, negligent party-support for female candidates, and women's passivity. In other countries, however, an effort to improving women's participation in political sphere has been spotlighted.

Recently, the Political Party Law in Korea also introduced a quota system for equal participation with aim to improving women's political influences. However, more efforts are needed for further development especially in cooperation with parties, government and women's organizations. More specifically, we would like to suggest the following challenges for active women's participation in political sphere: First, electoral district system should be reformed in order to eradicate local antagonisms and women's disadvantageous status (for National Assembly and local government committees, major constituency system and party list system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hould be adopted, and for district government committees, with binding two districts into one constituency, one female and one male candidates should be elected). Second, the Political Party Act should stipulate that parties violating quota system shall be faced 50% slash of subsidy and parties having over 30% female members shall be given incentives. Third, political funding organizations for women's representative powers within parties should be encouraged. Fourth, women's voice during preliminary election is essential. For this, 1) the voice should be heard in preliminary elections both for presidents and local governors, 2) central party office should establish nominee-selecting deliberate councils and adopt multi-nominating systems, and 3) quota system for posts in the party should be introduced. Fifth, special emphasis should be put to, for training woman leaders in politics, establishing comprehensive programs and human resources bank for it. Sixth, gender equality watchdog office under the umbrella of the Prime Minister should be set. Lastly, the strong networks between female candidates and social organizations should be recommended.

For example, the Social Democratic Party in Sweden makes it compulsory to assign at least 50% of slot to female candidates and plays a leading role in education for the future female leaders in politics. In particular, in France, a bill had been introduced in the parliament to ensure a half-and-half nomination for equal participation on both genders and passed in 2000. Under this resolution, any party violating it should be faced the 50% slash of subsidy. Such action surely came from the awareness that without women's participation, further national development cannot be possible. The Labor Party in Great Britain also has a similar quota system.